열린우리당 '해체모드'

초·재선 의원 20여명 집단 탈당…범여권 이합집산 급물살

민주당이 '특정세력 배제론'을 철회한데 이어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20여명이 8일 집단 탈당을 결행하기로해 범여권의 이합집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서는 김동철(광주 광산), 강기정(광주 북갑), 지병문 의원(광주 남) 등 3명이 탈당 행렬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은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이 창당하는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 2차 탈당파가 구성하는 제3지대 세력, 열린우리당 잔류파 등으로 분화될 예정이다.

특히, 15일께에는 정대철 고문 그룹과 문희상 전 의장 그룹도 탈당에 나서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해체의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제3지대 대통합 제안 민주당 범민주세력대통합추진위원회 엄대우 위원장 등 회원들이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3지대 대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이 8일 2차 탈당에 나설 것"이라며 "2차 탈당 세력은 이미 탈당한 천정배, 정성호, 이강래, 노웅래, 전병헌, 최재천 의원 등과 함께 대통합을 위한 제3지대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들끼기 다시 한번 탈당 시기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조율할 계획이지만 모든 것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상황"이라며 "일단 열린우리당 탈당 인원은 17명은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나를 포함, 지병문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며 "정동채 의원은 다선 의원으로서 열린우리당에 남아 추후 상황을 정리해야 하고 김성곤 의원은 최고위원이라는 점에서, 서갑원 의원은 친노 직계라는 점에서 탈당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초선의원인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이 배제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정치적 입장이 분명치 않아 탈당 세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8일 탈당하는 제3지대 세력은 독자정당 창당을 배제하고 대통합국민운동협의회와 국민경선추진기구의 구성을 통해 통합민주당 등 제정파가 당적을 가진 채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문희상, 유인태 중진그룹과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 등 대선 주자군은 일단 기다렸다가 15일을 전후에 합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단 탈당 도미노가 시작되면 이달 내에 60~70명 가량의 의원들이 탈당할 전망이어서 열린우리당은 친노 그룹과 비례대표 등 40명 안팎이 남는데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 내의 친노 그룹도 조만간 제3지대 합류세력과 마지막 사수파로 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발족하고 노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입김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다자 구도로 재편된 범여권 각 정파는 추후 후보단일화 노선과 우선적인 대통합을 통한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둘러싼 대립은 물론 대통합기구 주도권과 구성 방식, 참여 대상, 시기 등을 놓고 팽팽한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사람도 배제말고 모여야"

DJ, 한명숙 전 총리·장상 전 대표 면담…'대통합' 강조

김대중 전 대통령은 7일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배제됨 없이 모두 하나로 모여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와 장 상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는 국민의 바람을 이루는 것으로,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대통합을 이루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 전 총리가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와 장 전 대표가 각각 친노(親盧) 그룹과 민주당 박상천 대표 등을 거론하며 "모두 다 함께 가야한다"고 말하자 "두 분 얘기에 보탤 것이 없다"며 이 같이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친노 주자로 분류되는 한 전 총리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배제론'과 우리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역배제론'을 동시에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은 "현재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가 중요하기 보다는 누가 대통합을 위해 가장 기여가 크고 가장 헌신적, 효과적으로 노력했느냐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은 이 같은 노력을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고 한 전 총리는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소통합을 한 분들도 얼마 전 찾아왔을 때 대통합을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대통합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최근 방한한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와의 면담 사실을 소개하며 "21세기는 지식기반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두 분에게 특별한 존경심과 기대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의 출현에 대해 '국민이 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으며 저와 인생 역정이 비슷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높이 평가, 많은 힘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박지원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70여 분간 이뤄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전 총리와 민주당 장상 전 대표가 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동교동 사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배제론 철회' 뜻 살리려면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특정세력 배제론'을 철회했다. 중도통합신당과의 합당 선언 이후에도 배제론 고수 입장을 보였던 박 대표는 지난 6일 "통합민주당에서는 새로운 통합 원칙과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박 대표가 스타일을 구기면서까지 한 발 물러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 대표의 배제론 철회 배경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개혁세력의 민심이 대통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끌어 차기 대선에서 정권 창출에 나서라는 민심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배제론 철회를 요구하는 범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7대 총선 이후 미니 정당의 설움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냈었던 민주당으로는 지난 3년 동안 호가호위했던 열린우리당 핵심 세력과 함께 대통합을 이뤄야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이 같은 심경을 반영하듯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돈이 없어 당사도 구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 열린우리당은 자신들만의 파티에 도취해 있었다"며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들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지만 공당으로서 대통합을 원하는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서러웠던 세월을 뒤로하고 나름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세력 배제론'을 철회함에 따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은 이제 범여권에 돌아갔다. 열린우리당 몰락 이후 반 한나라당을 모토로 재편된 범여권은 국정 실패를 자인한다면서 입버릇처럼 정권 창출을 위한 대통합을 얘기해 왔다.

그러나 범여권 핵심세력과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 대통합을 위한 어떠한 기득권 포기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 범여권 대통합의 밀알이 되기보다는 정치적 역학구도를 둘러싸고 눈치보기를 거듭하는 등 지극히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범여권 핵심 세력들과 대선 주자들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백의종군을 선언하며 범여권 대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요구다.

과감한 기득권 포기를 통한 범여권 대통합의 길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감동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만이 여권의 정치적 리더로서 책임있는 자세며 정권 창출을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tuim@kwangju.co.kr

"광복절 제주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정세균 의장 국회연설 "홍보처 폐지는 정치공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7일 8·15 광복절에 제주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범여권의 최대 화두인 '대통합'을 역설했다. 대선을 불과 6개월여 남겨놓고 '적전분열' 상태에 빠져든 민주개혁진영이 다시금 대동단결해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주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며, 이 난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한나라당 '빅2'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무절제한 언급을 자제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경고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형평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그 것을 무력화하고 다시 뒤집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기자실 통폐합 논란과 관련, "정부 정책에 무리가 있지 않은 지, 일선 기자들의 제안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면서도 "그러나 언론자유 수호니, 국정홍보처 폐지니, 신문법·방송법 개정이니 하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대통령, 임시국회 국정연설 공식 요청

노무현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국회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7일 밝혔다.

정 수석은 "국회의장은 조만간 교섭단체 대표들과 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등 주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6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연설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통상적으로 교섭단체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 제 1당인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면 국회 연설은 성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